시험 치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생윤 해설 올립니다. 1 컷 48 예상합니다.

2027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 문항 및 해설 정리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사소통 행위에서 화자는 그의 발언으로 정확히 하나의 타당성 주장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청자는 합리적 동기에 따라 '예' 혹은 '아니요'라고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을 긍정 혹은 부정할 수 있다.

제시문 분석

- 하버마스(담론 윤리) 발상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은 이상적 담화 규칙에 해당하는 타당성 주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선지 분석

① 의사소통 행위에서 개인의 소망에 관한 타당성 주장은 제기될 수 없다.

→ 제시문 분석에 맞게 선지가 타당성에 대한 내용인데, 개인의 준칙, 주관적 견해(진실성)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이 가능하다. (×)

② 의사소통 행위가 반드시 상호 이해를 의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의사소통에서 지향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이해 지향적이다. **생활세계와 체계 중 생활세계가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서 상호 이해를 지향하는 특성이 있는 것과 다르게, 체계의 도구적 이성은 성취 지향적이다.** (×)

③ 의사소통 행위에서 모든 참여자는 규범의 당위적 타당성을 지향한다.

→ 정답. '규범의 당위적 타당성'이라는 표현이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수능특강 154 페이지 6 번 문제 제시문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란 행위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를 결정할 때 행위의 근거, 즉 타당성에 기반하여 행위를 결정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성, 정당성, 진정성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것의 일반적 준수가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의 충족에 대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이 모든 사람에 의해 비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때 '모든 타당한 규범이 그것의 일반적 준수가 ~'에서 '규범의 당위적 타당성'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④ 의사소통 행위에는 청자의 입장 표명이 불필요한 발언도 포함된다.

→ 청자의 합리적 동의 또는 거부(입장 표명)가 필수적이다. (×)

[관련 기출 근거]

- 2026 학년도 3 월 학력평가 16 번

제시문: 의사소통 합리성은 발화가 이해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발화를 이해 가능하고 수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화자가 발화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근거들이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을 인과적으로 실현해야 할 어떤 것으로 의도할 수 없다. **청자는 화자가 제기한 타당성 주장에 대해 합리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선지: ⑤ **의사소통 행위 주체들은 서로의 주장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O, 정답)

- 2026 학년도 7 월 학력평가 12 번

관련 선지: ④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O)

- 2026 학년도 10 월 학력평가 15 번

제시문: 성공 지향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혹은 상호 이해 지향적인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 전략적 행위와 의사소통적 행위가 구별된다. 담론 참여자가 자신의 행위 계획을 조정하는 상호 작용을 의사소통적이라 부른다. 이때 **도달한 합의는 타당성 주장에 대한 상호 주관적 인정에 따라 평가된다**.

→ 타당성 주장에 대해 합리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선지에서 서로의 주장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전에 출제되었다. 제시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화자가 타당성 주장을 제기할 때 합리적 동기에 따라 청자는 '예' 또는 '아니요'라고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진리성, 진실성, 정당성을 긍정 또는 부정할 수 있다.

⑤ 의사소통 행위에서 화자의 합리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근거 제시 능력에 기인하지 않는다.

→ 화자의 합리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근거 제시 능력에 기인한다는 표현이 기존 기출에 나왔다. (×)

- 2024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 번

제시문: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언의 합리성은 근거 제시 가능성에 있다**. 또한 담론 참여자가 지닌 태도의 합리성은 자신을 비판에 노출하고, 필요시 논증에 적절히 참여하려는 자세에 있다. 이러한 비판 가능성으로 인해 합리적 발언은 개선될 수 있다.

6.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점]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이 '하면 좋지만 하지 않아도 나쁘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혹은 흥청망청 소비하며 한 푼도 기부하지 않아도 법을 준수하기만 하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소득의 작은 일부를 가난한 이들과 나누려 하지 않는 부자들에게는 기부를 통해 막을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인류 전체의 행복을 위해 소득의 1%를 기부하는 노력이야말로 도덕적 삶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임을 유념해야 해요. 그런데 1%의 기부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해요. 부유한 사람 모두가 기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보다 더 기부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나아가 어떤 자선 단체가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증거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가장 효과적인 기부 방법을 찾아보세요. 또한 여러분이 기부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이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친구들이 기부에 동참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선을 최대화하는 효율적 이타주의자가 된다면 이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작은 일부만으로도 죽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더 나은 세상! 우리가 만들어요.

제시문 분석

- 피터 싱어(효율적 이타주의)의 해외 원조 입장에 관한 가상 편지이다.

선지 분석

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기부해야 한다.

→ 제시문에서 자선 단체가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증거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가장 효과적인 기부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때 '이성이 아니라'라는 표현은 쓸 수 없는 것으로 추론된다. (×)

→ 왜 감정에 대해 언급했을지 번역서(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황경식 역)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하딘이 '구명정 윤리'에 대해 저술한 이후,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인구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가 자신들의 인구를 먹여 살릴 능력은 하딘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이들 나라들에서 배고픈 사람들의 비율은 하딘이 그들에 대한 원조를 끊자고 주장했을 때보다 낮은 비율을 이제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프리카 국가의 인구성장률에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에서는 현재 1 억 4,400 만의 인구가 2050 년에는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때쯤이면 지금 7,700 만인 에티오피아의 인구는 1 억 4,600 만이 될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인구가 현재 6,300 만이지만 거의 세 배인 1 억 8,700 만이 될 것이다. 문제는 극단적인 빈곤 속에 살고 있는 큰 비율의 인구를 이미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의 이러한 급격한 인구성장률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이다. 삼분법의 옹호자들은 우리가 그러한 나라들의 인구성장이 사망률의 증가에 의해,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기아, 영양실조, 증대된 유아 사망률, 혹은 유행성 전염병에 의해 억제되도록 버려두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잣대를 가지는 삼분법의 결과는 너무도 처참해서 우리는 더 이상의 논의 없이도 이를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수백만이 굶어 죽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않고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평등이나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생각의 종국이지 않겠는가**? 삼분법에 대한 첫 반응이 부정적이 아닌 사람은 유쾌하지 못한 그러한 종류의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강한 감정에 기초한 첫 반응이 언제나 믿을 만한 지침이지는 않다.** 삼분법의 주창자들은 우리들의 행위가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에 정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지금 극단적인 빈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단지 미래의 더 많은 극단적으로 빈곤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만들 뿐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돕는 데 지치거나, 우리의 원조 능력이 마침내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의 고통은 우리가 지금 원조를 멈출 때 생길 것보다 더욱 클 것이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우리가 극단적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원조의 책무를 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불합리하게 보인다.

모든 풍요한 나라에도 상대적으로 빈곤한 다소의 시민은 있다. 그러나 절대빈곤은 대개 개발도상국에서만 존재한다. 미국에서 4 인 가족의 연간 수입이 2 만 2 천 달러 이하이면 공식적으로 빈곤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미국에서는 그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의미 있게 개선하려면 수천 달러가 들 것이 명확하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에서, 빈곤과 관련된 질병으로 그렇지 않으면 죽을 아이의 목숨을 구하는 데는 천 달러도 들지 않는다. 극단적인 빈곤 속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의 수입을 두 배로 하는 데는 5 천 달러도 들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비교를 위한 것이다. 빈곤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빈곤한 사람들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것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혜택을 크게 낼 수 있는 곳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운 좋게 우리 사회의 시민이 된 사람들만이 우리의 풍요로움을 나누어 갖도록 결정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 위와 같이 강한 감정에 기초한 첫 반응이 언제나 믿을 만한 지침은 아니라고 한계를 지적하며,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성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성을 활용해야 한다.

② 어떤 기부가 더 좋은 기부인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근거는 존재한다.

→ 정답.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선을 최대화하는 효율적 이타주의자가 된다면 이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공리주의의 도덕적 기준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점을 고려하면 객관적 도덕 기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부유국의 개인이라면 빈곤자의 복지를 위해 동일하게 기부해야 한다.

→ 자신이나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선진국 개인이 자신의 소득의 최소 1%를 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동일하게'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자신의 선행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

→ **수능완성 자료 플러스에 기부 사실 공개의 효과를 언급하는데, 해당 제시문에서도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구들이 기부에 동참할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선을 최대화하는 효율적 이타주의자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⑤ 부자들에게 빈곤으로 인한 죽음을 방관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없다.

→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하며 절대 빈곤을 막아야 한다. 이때 **절대 빈곤을 방지할 의무, 즉 방치하고 방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 선지는 '방관'이라는 단어로 재진술한 것이다**. (×)

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 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점]

(가)

갑 : 정당화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로서 최소 국가는 국민을 불가침의 개인으로 대우한다. 이를 넘어서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을 :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지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들은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이 원칙에 합의한다.

(나) [탐구 흐름도 구조]

- 출발 조건: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질문 A → [예] → 질문 B → [예] → 갑의 입장
- 질문 A → [아니요] → 질문 C → [예] → 을의 입장

제시문 분석

- 제시문 발상은 어렵지 않다.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선지 분석

① A : 천부적 재능으로 얻은 산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가?

→ 천부적 재능을 통한 이익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데, 이것이 이전될 수 있는지를 묻는 선지이다. 둘 다 천부적 재능을 통한 이익이 정당화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전 가능성도 인정할 수 있다. (×)

② B : 모든 구성원이 소유물을 정당하게 취득한 상태라면 그 분배는 정의로운가?

→ 정답. 그동안 매우 많이 제시문에서 나온 선지이다. 순수 절차적 정의, 즉 분배 과정·절차의 공정함 또는 정의로움이 분배 결과의 공정함 또는 정의로움을 보장할 때, 노직의 이론에서는 분배 절차의 정의로움이 분배 과정에서의 소유권의 정당한 취득 및 이전으로 결정된다. 즉 분배 과정에서 각 개인의 소유권이 정당하다면 분배 결과가 불평등해도 정당하다는 것이다.

③ B : 어떤 대상의 사용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그 대상을 소유하는 것은 항상 부정의한가?

→ **수능특강 82 페이지 9 번 문제의 5 번 선지에 '롤스와 노직은 개인이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지닌다고 본다.'라고 나온다.** 즉 '독점'이라는 표현이 낯설지만 배타적 사용권이라는 표현의 재진술에 불과하다. 둘 다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다. (×)

④ C : 정의로운 사회에서 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충돌은 불가능한가?

→ 이해관계의 일치도 가능하지만 이해관계의 상충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가 각자도생으로 흐를 수 있는데, 이보다는 협력·협동이 더 낫다. 이는 각자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협동을 위해 사회는 공정·정의로워야 하고 정의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즉 이해관계의 충돌은 가능하다. (×)

⑤ C : 정의로운 사회에서 최소 수혜자는 연민의 대상이므로 호혜성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운가?

→ 롤스는 최소 수혜자를 연민이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호혜성(상호 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적 협동의 참여자로 본다. (×)

→ 원전 번역서(존 롤스, 『정의론』, 황경식 역) 근거:

"그 결과 (아래서 주목한 것처럼) 모든 일상적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적 기본 가치에 근거한 적절한 척도에서 볼 때, 이 집단은 그 가족 및 계급적 기원이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하며, (실현된) 천부적 재능으로도 유리한 형편에 있지 못하며, 살아가면서 운수나 행운(luck) 역시 보잘것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이다. 실제로는 분명 여러 수정이 필요할 테지만, 최소 수혜자들에 대한 예와 같은 개괄적인 정의는 우연성과의 연관을 적절히 표현해 주며 여기서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충분할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육체적 필요와 정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건 및 정신 능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런 어려운 경우들에 대해 고려하고자 할 경우 정의론을 넘어서 있는 문제들을 성급하게 끌어들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덕감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놓아, 그 운명이 동정과 걱정을 유발하지만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할 수 있다.** 정의의 첫 번째 문제는 일상의 생활에서 사회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일생 동안 다른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협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적용된다.** 만약 이 원칙이 이 경우에 실패한다면 전반적으로 실패하고 말 것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최소 수혜자 집단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이다.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최소 수혜자들을 세 가지 주요한 우연성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로 선별해 보겠다.** … **나는 모든 사람이 정상적 범위 내에서 육체적 필요와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 및 정신 능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어려운 경우들에 대해 고려하면 정의론을 넘어서 있는 문제들을 성급하게 끌어들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 감각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 그 운명이 동정과 걱정을 유발하지만 불운한 사람들과는 다른 이들을 고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의 첫 번째 문제는 일상적 생활에서 사회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생 동안 다른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조직체를 형성하는 이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협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적용된다.

"또 **한 가지 점은 차등의 원칙이 호혜성(reciprocity)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상호 이익의 원칙이다. 그러나 얼핏 보면 그것은 최소 수혜자에게 불공정한 편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 … 그러나 만약 우리가 유리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우리는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에 의해 이미 더 유리한 바로 그들을 위한 이익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부여된 평균치를 극대화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두 번씩이나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리한 사람들은, **그들이 일반적인 관점으로부터 문제를 볼 때, 각각의 복지는 사회적 협력 체계에 의존하며, 만일 이런 협력 체계가 없을 경우 아무도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그들은 오로지 이 체제의 협력 조건들이 합당할 경우에만 모든 이의 자발적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해 주는 우월한 성격에 대해 응분의 자격을 갖는다는 주장 역시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그의 성격은 대체로 자신의 공로라고 주장할 수 없는 훌륭한 가정이나 사회적 여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응분의 몫이라는 개념은 여기에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다른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유리한 사람들 역시 그들의 천부적 자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권한은 인격(person)의 온전성(integrity)을 보장하는 **기본적 자유의 제 1 원칙에 의해 포괄된다.** … 일반적인 적절한 입장에서 볼 때, **차등의 원칙은 유리한 사람들과 불리한 사람들 양쪽 모두가 수락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 모든 사람의 복지가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 협동 체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득의 분배는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그 사회에 가담하는 모든 사람의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정리하면, 최소 수혜자는 동정·연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번역서 내용이 있으며, 호혜성의 원칙·상호성의 원리는 올해 수능완성 자료 플러스에도 나온다.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점]

갑 : 영구 평화를 위해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하며,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하고,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을 : 정치적 현실주의가 국제 정치의 지평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는 권력으로 정의되는 이익의 개념이다. 이 개념이 없다면 국제 정치 영역에 체계적 질서를 세우는 일은 불가능하다.

제시문 분석

- 갑은 칸트, 을은 모겐소(정치적 현실주의)이다. 발상은 어렵지 않다.
- 단, 을 제시문에서 정치적 현실주의가 국제 정치의 지평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권력으로 정의되는 이익의 개념'을 주목한 점과, 이 개념 없이는 국제 정치 영역에 체계적 질서를 세우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잘 챙겨 두어야 한다.

선지 분석

① 갑 : 평화 연맹이 수립되어도 국가 간 전쟁이 발생할 위험은 존재한다.

→ 정답. 수능특강 제시문에서 "영원한 평화는 확실히 하나의 실현될 수 없는 이념이다. 그럼에도 영원한 평화로의 지속적 접근은 인간 및 국가의 의무에, 또한 권리에 기초한 과제로서 실현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영원한 평화는 완전히 실현될 수 없는 이념이라고 하기 때문에 평화 연맹이 수립되어도 전쟁이 재발할 위험은 존재한다.

② 갑 : 적대적으로 행위하지 않는 이방인을 적대적으로 취급해야 할 경우도 있다.

→ 보편적 우호(환대권)에 따라 적대적으로 행위하지 않는 이방인을 적대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

③ 을 :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대국만을 협력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모겐소의『국가 간의 정치』445 페이지 한미 동맹 사례 때문에 나온 선지이다. 책에서는 "혜택과 정책 면에서 강한 동맹국이 허약한 동맹국에 비해 유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약소국이 강대국과 동맹을 가급적 체결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다. 한미 관계가 바로 그런 예다."라고 서술한다. 강대국만을 협력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을 : 국제도덕을 통해 국가 간 평화가 촉진되거나 저해될 수는 없다.

→ 수능완성 108 페이지 32 번 문제 제시문에서 "주권 국가들의 권력을 향한 열망이 주요 동력이 되는 세계에서 평화는 다음 두 가지 장치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는 세력 균형이다. 나머지 하나는 권력 투쟁에 대한 규범적 제한인데 국제법, 국제도덕, 세계 여론 등의 형태를 띤다."**라고 나온다. 국제도덕과 같은 규범적 제한을 통해 평화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오답이다. (×)

⑤ 갑과 을 : 국제 사회의 평화 상태는 국가 간 계약 없이 구축될 수 있다.

→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근원적 계약의 이념 아래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계약(연방)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

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 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피조물과 관련하여, 동물에 관련한 의무는 직접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

을 : 도덕의식 없는 의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사회의 도덕의식을 인간으로부터 대지로 확장하는 일이다.

병 : 모든 생명체는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실현하고자 애쓰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나) [벤다이어그램 구조]

- A : 갑만의 입장 | • B : 을만의 입장 | • C : 병만의 입장
- D :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 • E : 갑과 을과 병의 공통 입장

제시문 분석

- 갑: 동물에 관한 의무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라고 보므로 칸트이다.
- 을: 사회의 도덕의식을 인간으로부터 대지로 확장하는 윤리 확장을 주장하므로 레오폴드이다.
- 병: 모든 생명체를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보므로 테일러이다.

선지 분석

① A : 서로에게 의무를 갖는 두 존재는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의무를 갖는 존재는 어느 사상가가 와도 인간뿐이다. 따라서 이는 갑·을·병 모두의 공통 입장(E)에 해당한다. (×)

② B :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당위로 삼아야 할 이유가 있다.

→ 이는 레오폴드뿐만 아니라 테일러, 칸트까지 모두 포함하므로 E 에 해당한다. 적어도 테일러가 너무 확실히 긍정하므로 B 만의 입장이 아니다. (×)

③ C : 생명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은 언제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 **테일러의 우선순위 규칙 개념을 알아야 풀리는 선지로, 수능완성에도 출제되었다**. 우선순위에 따라 정당한 방어나 기본적 이익 충돌 시 생명체에 피해를 입혀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

④ D : 특정 종에 속한 생명체에 대한 의무만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할 수는 없다.

→ 정답. 2018 학년도 6 월 모평 15 번(갑: 싱어, 을: 레건, 병: 테일러) 선지 ㄱ("종의 차이만으로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은 싱어뿐만 아니라 테일러, 레오폴드도 긍정했던 선지이다. 해당 선지는 그 응용으로, 작년 기출에서도 출제된 바 있다. 칸트·싱어·레건·테일러·레오폴드 중 칸트(인간 중심주의)만 제외하고 모두 긍정하므로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D)에 정확히 해당한다.

⑤ E : 어떤 도덕적 고려의 대상도 도덕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

→ 인간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도덕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히 칸트는 인간에게 의무가 성립하는 이유가 순수 이성적 존재(신, 천사)와 순수 감성적 존재(동물)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성적·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동시에 충동으로 인해 악한 행위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의무 개념 즉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본다. (×)

1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점]

인간이 자기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 사회에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형은 어떤 의미에서도 권리의 문제가 아니다. 사형은 국가가 한 시민의 존재를 파괴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와 벌이는 전쟁이다. 사형이 필요하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인도주의라는 대의명분을 갖는 것이다.

제시문 분석

- 베카리아의 형벌론 제시문이다. "사형은 어떤 의미에서도 권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문장을 잘 챙겨 두어야 한다. 이는 사회 계약론적으로 사형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선지 분석

① 범죄가 사회에 초래한 해악만으로 형벌의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 비례성의 기준으로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있지만 이는 형벌의 '양(정도)'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면, 형벌의 '방식'은 이러한 해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방 효과를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 형벌 방식은 양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인데, 이는 종신 노역형과 사형이 예방 효과를 기준으로 비교된 기존 개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② 형벌은 범죄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을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응보주의(칸트)의 입장이다. **베카리아에게 형벌은 고통 부과 자체(응보)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 예방과 범죄자 교화에 목적이 있다. 올해 EBS 에 형벌의 목적 중 예방 효과(본보기) 말고도 교화·교정이 매우 많이 나왔는데 결국 출제되었다.** 베카리아의 형벌 효과에는 교화·교정도 포함된다. (×)

③ 범죄 의욕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형벌은 정당할 수밖에 없다.

→ 정답. 종신 노역형은 사형과 달리 사회 계약론적으로 옳고 범죄 의욕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형벌이므로 정당하다.

④ 시민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형벌은 비공개로 집행되어야 한다.

→ 종신 노역형은 공개성이 커서 일반 시민에 대한 예방 효과가 크다. (×)

⑤ 범죄의 경중을 측정함에 있어 범죄자의 의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 매우 중요한 선지이다. **올해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은 '의도'라는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수능완성과 그간의 기출문제에서 나온 베카리아의 '의도'는 서양 윤리에서 공리주의가 기준으로 하는 '결과'가 아니라 의무론·동기주의인 칸트가 중시하는 '동기'와 같은 단어이다. (수능완성 52 페이지 9 번 문제 3 번 선지: '공리를 해치려는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 범죄의 경중을 판단해야 함을 간과한다.' → 베카리아·칸트 둘 다 아니어서 오답이었던 선지)

- 반면 수능특강 79 페이지 3 번 문제에서 칸트(갑) 제시문에는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라고 나오고, 3 번 선지에서 을(베카리아)에 대해 "형벌에는 시민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여 맞는 선지로 쓰였다. 즉 수능특강의 '의도'는 '목적'과 같은 단어로서, 공리주의가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맥락과 궤를 같이한다.**

- 따라서 '**의도'라는 단어는 맥락에 따라 의무론적 윤리에서의 동기(선의지)를 말할 수도 있고, 공리주의의 목적하는 결과를 의미할 수도 있다. 해당 수능 문제는 '의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므로 기존의 기출과 수능완성에서처럼 동기주의적 관점의 의도·동기로 보는 것이 맞는데, 베카리아는 동기주의가 아니라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라는 '결과'를 기준으로 형벌의 정도를 비례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답이다. (×)**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점]

> 확립된 상설의 법률이 없는 통치 또는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은 그 어느 것도 사회 및 정부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다. 자신들의 생명, 자유,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권리와 재산에 관한 명시적 규칙을 통해서 평화와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를 포기하거나 사회에 자신들을 구속시키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시문 분석

- 존 로크의『통치론』에 관한 제시문이다.

선지 분석

① 자연 상태에도 공통의 동의를 통해 인정되고 알려진 법이 존재한다.

→ 자연 상태의 자연법은 이성을 통해 파악되는 신의 뜻이지, 인간의 공통된 동의를 통해 인정되고 알려진 실정법이 아니다. (×)

② 자연법의 집행권을 양도하지 않고 시민 사회가 수립될 수 있다.

→ 자연 상태에서의 개별적 집행권(처벌권)을 양도·포기해야 시민 사회가 수립될 수 있다. (×)

③ 시민 사회의 공공선을 위한 경우에만 소유권 침해가 정당화된다.

→ 수능완성에서 공공선을 위해 제한 가능하다고 본 것은 '입법권'이다. 로크의 통치론을 보면 저항권 행사의 상황에서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때(즉 도둑질과 같은 상황)를 언급하며, 동의 없는 재산 침해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

④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권한은 제약 없이 행사되는 최고 권력이다.

→ 입법권은 최고 권력이지만 제약 없이 행사되는 절대 권력이 아니며, 신탁에 반할 경우 저항권(신탁 철회) 행사가 가능하다.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1 회 문제에서도 공공선에 의해 제한 가능하다고 나온다. (×)

⑤ 정치 권력에 대한 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당사자의 동의뿐이다.

→ 정답. 명시적 동의든 묵시적 동의든 결국 당사자의 동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이다.

19.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갑 : 노예 제도를 지지하고 있는 이 정부를 단 한순간이라도 나의 정부로 인정할 생각이 결코 없다. 정의가 승리하도록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채, 한 표 앞선 다수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
> 을 : 정의로운 체제를 위해 우리는 다수결 규칙에 의거하게 된다. 그런데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체제를 지키기 위해 부정의한 법에도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정당성의 원칙에 의거해 불복종할 수도 있다.
>
> 병 : 다수의 결정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수의 견해와 일치하는 법이라 해도 그 법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해악이 발생한다면 그 법에 불복종할 수 있다. 이때, 그 불복종의 결과를 고려해야만 한다.

제시문 분석

- 갑은 소로, 을은 롤스, 병은 싱어이다. 올해는 '양심'이라는 키워드가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모두에서 매우 많이 강조되는 만큼 소로가 출제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였다.

선지 분석

① 갑 : 법과 양심이 충돌할 때 양심에 따르는 것은 항상 바람직하다.

→ 소로는 법보다 양심을 따라야 한다고 보며, 한 사람의 국민이기 전에 먼저 인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O)

② 을 : 개인의 이익이 증진되는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

→ 개인의 이익을 '근거'로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시키는 것과, 정당한 시민 불복종의 '결과'로서 개인의 이익이 증진되는 것은 다르다. (O)

이를 도식화하면, 전자는 [개인의 이익 → 시민 불복종](불가)이고, 후자는 [시민 불복종 → 개인의 이익](가능)이다.

이전 **2025 학년도 수능 선지에서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과 '법이 차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또는 현저하게 위반하는 상황'이 구별되었던 것과 같은 원리이다(전자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후자는 제 1 원칙 및 제 2-2 원칙이 시민 불복종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이 될 수 없음). 즉 근거와 결과는 다르다. (2025 수능: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O)**

③ 병 : 헌법의 기초가 되어야 할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는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 정치적 원칙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규제하는 기초가 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점과 다르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에 대한 다수의 정의관이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라고 보지만, 싱어는 완전한 다수의 정의관은 없기 때문에 다수의 정의관 역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헌법의 기초가 되어야 할 원칙을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라고 볼 때, 이 또한 다수결이 51%가 맞으면 49%도 맞을 수 있듯이 절대적이지 않으므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때 정의의 원칙과 다수의 정의관이 사실상 재진술 관계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O)

④ 갑과 병 : 법에 대한 존중심이 감소되는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

→ 싱어에게 특히 해당하지만 소로도 해당한다. 소로는 양심에 근거한다면 법에 대한 존중심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불복종이 가능하다. (O)

⑤ 을과 병 :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을 시정하기 위해 법체계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 정답(적절하지 않은 진술). 법체계 전체에 대한 거부는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롤스에게 시민 불복종의 주체는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국한된다.